

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경과와 의의

지난 3월 6일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. 장애인 인권 신장과 차별시정 정책의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동법의 제정경과 및 의의를 보고 드립니다.

1. 제정 경과

- 장애계는 장애인차별금지법(이하 '장차법') 별도 입법추진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추진연대(장추련) 결성('03.4)
 - 인권위는 장차법 별도 입법에 대해 찬성 입장 표명('06.5.26)
- 정부는 제80회 국정과제회의(장애인지원종합대책, '06.2.28.) 후, 장차법 민관공동기획단(11개 정부기관, 장추련 대표)을 구성('06.8), 장애계와 이견조정 및 법안작성 추진
 - 총 12차례의 회의를 거쳐 정부최종안 마련
- 확대당정회의를 거쳐 의원발의(장향숙의원 대표발의) 후, 보건복지위(대안) 심의를 거쳐 상임위('07.2.22), 법사위('07.3.2), 본회의('07.3.6) 통과

2. 장차법의 주요 내용

- 장애개념 : 신체적·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 (법 제2조)
- 금지대상 차별행위 (법 제4조)
 - 4대 행위 : 직접차별, 간접차별,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, 광고에 의한 차별
 - 과거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사유로 한 차별도 금지
 - 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차별과 보조금 및 장애인보조기구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
 - 과도한 부담이 있는 경우나 직무성질상 불가피한 경우, 그리고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는 차별행위의 예외로 인정

□ 금지대상 차별영역 (법 제10조 내지 제37조)

- 6대 영역 : ①고용, ②교육, ③재화 및 용역의 제공, ④사법·행정절차·참정권, ⑤모·부성권, ⑥가족·가정·복지시설·건강권

- 장애여성·장애아동·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는 별도 장에서 규정

□ 차별시정기구 및 시정권한 (법 제38조 내지 제50조)

- 인권위 내에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설치 (차별시정기구 일원화)

○ 시정권한 : 인권위는 시정권고,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

○ 입증책임 배분 및 법원의 구제조치 도입

○ 악의적 차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
□ 시행시기 :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**정당한 편의 제공은 단계적으로 시행**

♣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이

□ 장애를 접근하는 시각

○ 장애인복지법 : 개인이 가진 손상 및 기능상실을 중시 (개인적·의학적 모델)

○ 장차법 : 장애인이 적응할 수 없는 사회환경과 태도를 중시 (사회적 모델)

※ 서구 국가는 '80년대부터 사회적 모델을 장애정책에 수용해 왔고, WHO는 '01년 사회적 환경과 태도를 중시하는 새로운 장애개념(ICF) 제시.

※ ICF :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, Disability and Health

□ 추구하는 목적

○ 장애인복지법 : 복지서비스 등을 통한 혜택의 제공

○ 장차법 : 차별판단 및 차별시정을 통한 사회환경과 태도의 변화

□ 권리의 성격

○ 장애인복지법 : 정책의지나 예산상황에 따라 집행상의 기복 발생

○ 장차법 : 차별이 발생했을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법적 권리 발생

예) 재활보조기구를 갖지 못한 장애인이 그로 인해 고용되지 못했을 경우

- 장애인복지법 : 정책적 미비의 문제이며 법적 권리·의무의 문제는 아님

- 장차법 : 재활보조기구를 제공치 않은 사회가 장애인을 차별한 것이며 따라서 사회는 이를 시정할 법적 의무를, 장애인은 재활보조기구를 제공받을 법적 권리를 갖게 됨 (따라서 재활보조기구는 사회가 당연히 제공해야 하고 장애인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“정당한 편의”의 한 가지)

3. 장차법 제정의 의의

- 장차법 제정은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오는 역사적 사건
 - 장애인정책을 개인적·의학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선진화
 - ※ 장애인복지법 제정(’81년)과 장애인의무고용제도 도입(’90년)을 훨씬 뛰어넘는 성과
- 국정과제 로드맵에 의한 차별시정정책의 커다란 성과
 -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당당히 서는 장애인 위상 정립 및 지위 제고
 - 아시아권에서는 홍콩(’95)에 이어 두 번째로 별도 장차법 입법
 - ※ 서구국가의 별도 장차법 : 미국(’90), 호주(’92), 영국(’95), 스웨덴(’99), 독일(’02) 등.
- 사회적 합의에 의한 참여적 정책결정의 모범적 선례
 - 장차법 민관공동기획단에서 대화와 토론으로 갈등해결, 정부와 장애계 간 신뢰 구축
 - ※ 장애계는 장차법 국회 통과 즉시 일제히 환영 성명 발표, 올해 대선에서 장애인차별시정문제를 적극 제기할 계획

4. 향후 추진 계획

- 정부합동준비단 구성·운영을 통해 장차법 시행 준비에 만전
 - 장차법 홍보 실시 및 법 시행 후 예상쟁점에 대한 연구 착수
 - 연구결과를 시행령 작성에 최대한 반영
 - 제3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(’08~’12년)을 장차법의 단계적 시행을 중심으로 수립
 - ※ 수요자중심 업무보고(장애인)시 장차법 서명식을 병행 추진 (’07. 4. 4)
 - ※ 참고 : UN 장애인권리협약 (’06.12.13 채택) 서명식 (’07.3.30, 복지부 장관 참석 예정)
- 기존 법령·제도의 개선작업 추진
 - 5월까지 기존 법령·제도 검토작업 완료, 6월부터 계획 수립